

‘내년 최저임금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61.7%

취임 후 최대폭 하락…역대 최저치(60.8%)에 0.9%p 차 근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6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저치인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때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7월 3주차 주중집계 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4.1%에 따르면 전체의 61.7%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32.3%(매우 잘 16.6%·잘못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0%로 집계됐다.

61.7%라는 긍정평가는 사흘 전에 발표된 7월 2주차 주간집계(68.1%)보다 6.4%p 떨어진 수치다.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전까지 가장 큰 낙폭은 인사 논란에 겪어았던 지난해 5월 5주차 때 떨어진 6.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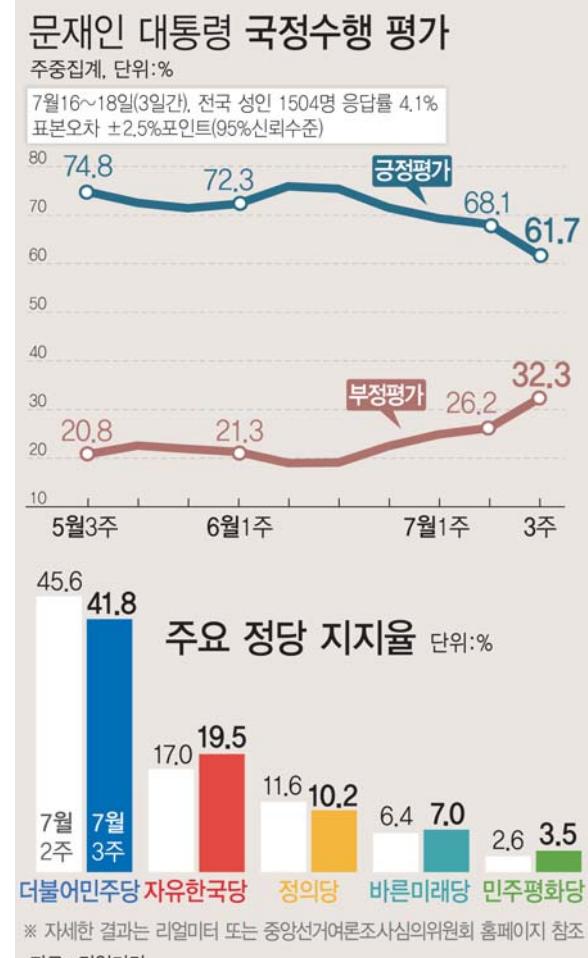
5주 연속 하락한 지지율은 올 1월 4주차 때 가상화폐 논란과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겹치면서 나타난 역대 최저치(60.8%)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지를 하락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역업 자군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12.2%p 하락한 48.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12.3%p 내려앉은 45.5%로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연령별로는 50대(11%↓·54.3%)에서 두 자릿수 하락율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정의당이 7주 연속 상승세를 끌고 나고 내림세로 돌아섰다. 7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1.4%p 하락한 10.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3주 연속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5주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8%p 폄



※ 자체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리얼미터

뉴스스

주승용 “안철수, 출국 전 호남 지역민에 한마디를”

“안철수·유승민 당 보물…정계은퇴 주장 현혹 안 돼”

주승용 신입 국회부의장은 19일 독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 “(해외로) 나가기 전에 광주지도 한 번 가서 광주, 호남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뉴시스와 만나 바른미래당 서율시장 후보였던 안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 같은 해 4·13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의석 28곳 중 23곳을 씨들이며 선전한 바 있다.

안 전 의원과 창당 과정을 함께했던 주 부의장은 지난해 5·9 대선 직후 원내대표로서 국민의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바른정당 통합론’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했었다. 그는 이후 안 전 의원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당원투표에 힘을 실으며 우회 지원했다.

주 부의장은 “일부에선 (안 전 의원의) 정계은퇴를 얘기하지만 50대의 나이에 정계은퇴란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며 “2선 후퇴를 해 유럽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하고 정치적 역량도 많이 쌓아온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머잖은 장래에 (안 전 의원을) 다시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 전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는 우리 당의 귀중한 보물”이라며 “이 조그만 정당에 대선후보가 둘이나 있다는 것은 자랑이다. 이 두 분에 대한 정계은퇴 주장에 혼혹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지원 “국회 상임위원장, 군림식 운영 바람직하지 않아”

“위원장 간사와 자리 바꿔 제대로 질문 바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관할 장관 및 산하 기관장과의 질의응답 시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벼려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자신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9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원장석에 군림하는 식으로 장관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비범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3대에 걸쳐서 법사위를 11년째 하고 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이당일 때 법사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마다 당시 여당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위원장을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간사석에서 질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최재성 “혁신·시스템 정당으로 입법권력 교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준비된 혁신과 불가역적 시스템정당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여당’을 만들어 입법권력을 교체하겠다”며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4기 민주정부를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멈춰버린다. 21대 총선 승리는 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분단되거나 심하게 흔들리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만병의 근원

이 공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보면, 취임 2개월 내에 공천룰을 확정하겠다”며 “모든 공천규정을 특별당규로 정하고, 전 당원과 전 대의원의 투표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략공천을 금지하겠다. 꼭 필요한 경우 전략경선지역을 지도부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당정관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 의원은 “여당 대표는 안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주장은 설

갈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도 19대 4년 내내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이 4년 내내 있었다”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가 출발한 이틀째에 또 이런 이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위원장도 질의의 할 때 동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하는 것은 위원들 사이의 관례였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기도 하다”고 중伤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법무부 차관, 김현정 현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가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관련, 민원대응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중심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득력이 없다. 하명 받고 움직이는 대표도 불필요하다”며 “내신 정책과 정무에서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15년 당시 분당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깊이 소통하며 똑심으로 돌파했다”며 “최재성이 당정의 신동반적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두관 “당내 분열주의 완전히 없애겠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당내 분열주의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는 수평적인 정당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로 뭉쳐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열주의의 가장 앞에 섰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갈등과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 절하게 반성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누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 그러면서도 모두 함께 하나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이 강한 분권정당, 지역에 힘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원과 지역을 믿고 당의 권력을 과감히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정당에서도 보증성의 원칙을 실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시도지사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전 등) ▲지자체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및 최고위원회 권한에 준하는 자치분권협력회의 설치 ▲시도당으로 중정분권 실시 ▲지방정부 지원 강화 예산 등 당정협의 정례화 등) ▲시도당에 민주연구원 분원 설

치 등을 내걸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고 시민이 함께하는 당원주권 시민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전략공천 폐지 및 권리당원 직선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원을 당원에게 반환(권리당원 전원투표제로 비례대표의 우선순위 결정) ▲당원소환 당원발언의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